

*** 쟁점 2

시민운동, 대중운동의 가능성

발제●

대중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 그 가능성

하승창

논평●

세계화 시대에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운동의 대중성

이희수

대중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 그 가능성

하승창

들어가면서

대개 경실련이 창립하던 해인 1989년을 본격적인 시민운동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고 있으니 시민운동이 본격화된 지 올해로 15년 정도가 지나고 있다. 그간 시민운동의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의 확장은 그 어떤 운동보다도 급속한 것이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시민운동의 대표적 단체들에 대한 인지도는 몇 년 전의 일부 조사들에 의하면 20%가 넘기도 하므로 시민 10명 중 2~3명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유명 시민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셈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의외로 환경운동연합보다 녹색연합의 인지도가 높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시민운동에 대한 여러 본격적인 문제제기의 시작은 1997년에 있었던 경실련의 김현철 비디오 테이프 사건이었다. 경실련 창립 초에도 관련 논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전개된 문제제기의 시작은 이 무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이 한약분쟁의 조정이나 금융실명제의 도입,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고발과 구속 등으로 그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한창 커져 있던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은 성장 일로에 있던 시민운동에 대한 성찰을 비로소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낙인을 부여하면서 시작된 이 문제제기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운동의 방식과 재정문제, 조직의 관료화 등 여러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핵심적으로는 결국 시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시민들이 주체가 되기보다, 일부 전문가나 상근운동가가 중심인 운동, 소위 엘리트 운동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일반적으로 제기된 해법도 지역과 작은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대중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었고 비대해진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관료적 질서나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97년 이후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 중 유력한 시민단체들이 대중적 전망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그대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의 대중적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시민운동의 대중적 전망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등 여러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필자가 의문 전체에 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가지고 있었던 시민운동이 그리 대중적이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생각과 시민운동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민운동의 대중적 전망과 관련하여 향후 시민운동의 과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앞서 가는 시민, 뒤에 처진 시민운동

1. 시민은 있다, 시민은 없다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막연히 시민이 없다는 표현의 부정확성과 그 표현에 담긴 정치적 함의 때문에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용어 사용을 꺼려했다. 시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각 단체에 가입해 있는 회원의 수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실제적 참여, 지역 조직들에서의 회원참여 등을 놓고 보아도 시민이 없다는 비판은 선뜻 수긍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시민운동이 이 표현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정치적 함의 때문이다. 시민운동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시민운동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집단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었다. 그 내용은 시민단체란 결국 시민을 대표하지도 않고, 위임받은 것도 없으면서 시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며, 사실은 몇몇 엘리트들의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 보내졌던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는 그만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을 보여 주었다. 이를 두고 시민이 없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다. 더구나 개별단체들의 회원규모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이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특히 정치적 과제를 목표로 하지 않는 단체들의 시민참여는 논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 비판의 커다란 약점이다.

실상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비판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큰 단체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도 그리 틀린 것이 아니다. 이들 단체의 운동이 전문가나 상근운동가 중심이라는 비판은 유효한 것이다. 이들 단체의 시민참여는 양적인 측면에서나 참여 양식에서 '주체'적 참여의 모습을 발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운동처럼 90년대의 시민운동에서도 대중은 동원대상이다.

2. 엘리트 운동, 언론플레이가 능한 운동

현재까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큰 단체들의 경우 몇몇 주요 인사들이 대표하는 운동이며, 언론플레이가 능한 운동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들의 활동이 일반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단체에서도 회원조직들이 일정하게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체를 대표하는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들 단체의 활동은 전문가나 상근운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90년대의 시민운동은 경실련의 활동방식이 대표적이다. 경실련은 출범시 자신의 운동을 정책대안 중심의 운동이라고 했다. 강령적 구호나 주장을 내세우는 운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운동할 것이라 했고 경실련은 그 점에서 성공한 운동이었다. 학계나 관계(官界) 내부에서만 논의되던 정책과제들이 시민사회로 쏟아져 나왔고 공론의 대상이 되었다. 관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어려웠던 전문가들은 대거 경실련에 결합하면서 비판적 대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경실련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성장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운동은 공청회, 토론회, 입법청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여론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언론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운동의 수단이 되었다. 이같은 운동방식에서 일반시민들은 '지지'와 '격려'가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였다.

즉 운동의 지향과 방법이 일반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 경실련은 출발할 때부터 그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경실련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회원조직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회원조직은 거의 없다. 유사한 운동방식을 채택한 참여연대도 초기에 '나라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회원조직이 사업과제를 맡아 활동한 경우도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조직이 사업을 대표하는 경우는 적어졌다.

90년대 방식의 시민운동의 고양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서 정점에 달한다. 애초부터 조직된 부대가 없었고, 조직된 부대를 수단으로 운동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던 시민운동은 자신이 제기한 사회적 의제에 공감을 표하는 여론을 조직함으로써 대중과 결합하였다. 조직된 부대는 아니지만 그간 시민운동에 보내졌던 여론의 지지와 격려는 시민운동이 성장할 수 있게 한 동력이였다.

동시에 이같은 방식이 가능했던 것이 한국정치의 비정상에 기인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4년 총선을 통해 한국정치가 비로소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한 조건을 획득했다는 것은 더 이상 90년대 방식의 시민운동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곧 향후 시민운동이 대중과 결합하는 방식은 과거와는 다르게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시민이 앞서 나가고 있다

90년대 시민운동의 방식으로 시민운동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만 가능한 '시민이 없는 운동'이라는 비판은 유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비판은 2004년에 와서야 비로소 비판의 적 절성을 획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주체적 참여라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담긴 운동적 함의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운동을 둘러싼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오고 있다. 이 변화의 근저에는 인터넷이 있다.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은 2002년 대선이었다.

2000년 총선에서는 우리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총선 시민연대라는 시민운동조직을 통해 표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의지는 실제 낙선운동으로 이어져서 수도권외의 경우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의 90%가 실제로 낙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낙선대상자 명단은 인터넷을 타고 여기저기 유포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 지역구의 낙선대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이를 투표의 지침으로 삼았다. 한 정치학자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낙선운동이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시민운동이 조직하거나 이들이 낙선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시민운동과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2002년 대선은 판이하게 전개되었다. 2000년과 마찬가지로 시민운동은 대선유권자연대를 조직하여 2002년 대선에 대응하였다. 시민운동이 주장하는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각 대선 후보 진영이 이를 채택하도록 사

회적 압력을 조직하는 한편 부패정치의 근절을 위해 대선자금 실사를 위한 약속을 받아 내기도 했지만 2000년 총선처럼 결정적인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반면 노사모를 비롯해서 정치적 지지를 분명히 한 그룹들의 역동성은 대선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선거과정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뿐 아니라 정치자금을 모아 주기도 했고, 선거전의 주요변수가 생길 때마다 여론전의 선봉에 서서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이들은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추구했다. 2000년 시민단체를 통해 정치적 변화를 추구했던 시민들은 2002년에는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은 노사모와 같은 자발적 조직이 인터넷에서 갖는 위력을 실감했다. 대개의 단체들이 홈페이지의 개편과 콘텐츠의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2004년 역시 네티즌들은 시민단체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지는 않았다. 문제의 근원이 홈페이지의 구성과 디자인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기한 선거대응 방식이 특징적이었던 2004년 시민운동은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만큼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탄핵무효 운동에 그 무게중심을 실었다. 시민운동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중적 결합을 자랑했지만 이는 기존 시민단체만의 역량은 아니었다.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참여도 컸지만 무엇보다 인터넷 곳곳에서 결성된 자발적인 조직들의 힘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과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이처럼 이미 시민단체를 넘어서서 자발적인 힘으로 변화를 추동하고 있었고, 시민단체들은 이 움직임을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4년에도 역시 네티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것이다.

이같은 흐름은 2002년 대선 당시 뿐 아니라 그 이전에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집회에서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 한 사람의 제안이 전국을 촛불로 뒤덮게 했으며 사회운동은 이를 거두어들이며 운동을 조직할 수 있었다.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자발적 조직들은 이미 인터넷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과거 같으면 이들은 시민단체나 민중운동단체를 매개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했겠지만 이제 인터넷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고, 이를 오프라인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과제 뿐 아니라 아파트가격내리기시민모임이나 각종 소비자 운동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 이들 모임에는 상근운동가도 없고, 전문가도 없으며 지속적인 재정수입이 필요하지도 않다. 90년대 시민운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운동이 인터넷을 매개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시민운동은 대중적 공간을 넓혀 가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 시민단체들이 시민들과 결합하거나 운동이 대중적으로 고양되는 것은 이처럼 일시적이고 단속적이다. 기존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며, 운동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함께 걷기 위해

1. 변화된 조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민단체들은 이제 그 대중적 공간을 열어 가는 데 있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론 자신의 운동적 지향과 운동의 방식을 90년대 방식으로 고집할 수도 있고 그 방식 또한 여전히 유효한 방식으로 시민운동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90년대 운동의 가치와 운동방식은 더 이상 그리 매력적이지도 않고 시민운동이 제기하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가는 데도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선거 시기에 덧씌워진 정파적 이미지로 인해 시민단체의 주장이 그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시민운동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과제를 성찰하는 일과 더불어 운동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앞서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부족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높아져 있다. 말하자면 대중적 공간은 오히려 확대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인터넷이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보다 대중적인 결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민사회의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기존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운동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방식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더욱 더 전문가 중심, 상근운동가 중심의 운동이 될 것이다. 물론 그래도 된다. 모든 운동이 대중적 운동이어야 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운동의 지향을 보다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장하려 한다면 변화된 조건에 조응해야 한다. 그 키워드는 인터넷에 담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기본단위인 '개인' 들이다.

2. 개인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 시민운동과 시민의 결합

시민운동의 대중적 결합을 이야기할 때 흔히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곤 한다. 하나가 지역이라는 방향이다. 시민단체가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하는 직접적 공간 중 하나가 '지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점에서 시민운동이 보다 대중적인 결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이라는 현장과의 결합은 반드시 자신의 조직적 목표로 두어야 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류는 중앙조직 혹은 소위 메이저 단체들의 복사판에 가깝다는 것이 솔직한 진단일 것이다. 이 점에서 부안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경험은 시민운동에 중요한 자산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라는 방향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고리로 하여 시민운동이 기층대중 조직과 제휴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90년대 사회운동의 숙제처럼 이야기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는 공통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추구라는 전제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민중운동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시민운동은 이를 설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는 목표의 동질성이라기보다 개별 사안에 대한 일시적 제휴와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민중운동의 경우 민주노동당과 같은 정당을 매개로 한 권력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시민운동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 방향은 민중운동의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점을 짚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민운동이 현재의 정치세력과 다른 자신의 독자적 정치공간을 확보하느냐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경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일을 자신의 과제로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정치적 프로그램—예컨대 녹색당 같은—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연 시민운동이 갖게 될 정치적 경향이 민중운동이 지향하는 가치와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이냐이다.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는 그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로서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는 민중운동의 과제라는 측면이 강하고 시민운동은 아직까지 과제로 올려놓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어떤 발전경로를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민중운동이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과제로 겨안는 경우나 민주노동당이 시민운동의 가치나 과제를 얼마나 수용하느냐 하는 것도 두 운동의 연대에 관한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분간은 여전히 탄핵무효운동이나 파병철회운동처럼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이 동일한 과제로 여기는 사안별 연대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운동 역시 일상적으로 기층대중 조직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과제가 주된 측면이
기 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매개로 생태, 인권, 젠더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운동이 자신
의 대중적 공간을 확대하는 데 소홀히 해 왔던 지역과 기층대중 조직과의
결합은 중요한 숙제임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 시민운동이 자신의
대중적 기반의 확대를 위해 변화된 조건을 인식한다면 지역과 기층대중 조
직이라는 방향과 더불어 인터넷을 매개로 한 개인들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는 이미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보아 왔다. 각종 소비자운동 사이트가 한 개인의 홈페이지
개설로 시작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홈페이지가 운동에 관한 주요한 정보의
소통공간이 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제안이 전 국민의 모금운동으로 발전했
던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도 기억한다. 한 사람의 제안이 블로그와 포털사
이트의 카페를 타고 순식간에 전 사회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도 적
지 않게 보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는 '개인' 과 '네트워크' 라는 요소가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흐름은 이미 시민운동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운동이 보다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시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개별 시민이 시민단체를 매개로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던지고
의미있는 자신의 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시민운동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성찰적 시민들을 확대하고 그 대중적 지평
을 높이게 될 것이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지향이 시민운동
이 자신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주요한 방향으로 숙고되어야 한다. ■

하승할 chang@mail.wv.or.kr | 함께하는 국민행동 사무처장, 시민방송 이사. CBS 시사자키 진행자로 활동
했으며 저서로는 『하승할의 NGO이야기』가 있다.

세계화 시대에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운동의 대중성

이희수

대중 없는 시민운동은 사회운동의 제도화, 엘리트화에서 발생한다

하승창 사무처장이 문제 삼고 있는 시민운동은 역사적으로 87년 6월항쟁 이후 형성된 시민운동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협의회 활동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총선시민연대 활동 등 일종의 사회운동형 또는 참여민주주의형 시민운동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87년 이전부터 탈정치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오늘날 자율적 활동형태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당수의 봉사형 조직과 권익형 조직 그리고 대다수의 자익형 조직 등 비영리 단체들은 논의에서 일단 제외하도록 한다.

그런데 나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발제자가 범주화하고 있는 시민운동과 지역운동,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간의 결합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 대신 시민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지역주민운동 등 전통적인 사회운동 또는 민중운동은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추동해 왔던 강력한 행위 주체였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운동, 정치운동을 기본축으로 설정하면서도 시민사회 영역에서 병참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전략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해 왔다. 따라서 경실련 등 시민운동이

한국사회운동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수행한 노동운동의 민주화 운동, 사회운동형 성격을 권익단체나 이익단체 등으로 축소시켜 시민사회운동을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으로 대립시켜 왔던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를 겨냥한 사회운동형 노동운동 전략은 수구보수세력과 자유주의보수세력 등 양대 정치세력으로부터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같은 문제설정은 4·15 총선 이후 시민사회의 해체 모니를 둘러싸고 진보적 정치세력과 자유주의적 정치세력 간의 본격적인 장외 대결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경실련과 참여연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시민운동이 대중적 사회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 비판적이다.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했던 경실련의 초창기 신선함은 시간이 갈수록 전문가 중심의 자유주의 시민운동, 시민 없는 엘리트 시민운동으로 전략해 갔다. 특히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협은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던 노동운동, 민중운동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을 촉진하기보다 정부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사회 안에서 노동운동을 고립시키고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의 보수화,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체성의 한계를 일찌감치 드러냈다.

그런 면에서 제도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권력화되어 가는 경실련의 정부친화적 시민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표방한 참여연대의 등장은 민중적 사회운동과 진보적 사회운동을 포괄하는 시민사회운동 전략으로 주목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역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수구보수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진보적 자유주의 개혁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시민사회를 시대의 요청에 맞게 보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내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민중운동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된 IMF 시기에 참

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 진영은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하여 초국적 자본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대안적 경제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재벌 개혁과 주주 자본주의 정착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함으로써 신자유주의 IMF 체제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을 시민사회 안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과 자유주의 정권의 IMF 개혁론 옹호는 참여연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과 사회개혁 운동마저 정책적으로 제약함으로써 민주적 사회운동과의 실질적인 공조와 연대로 진전하지 못했다.

이같은 경향은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즉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 시민운동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 수구보수세력의 청산, 일반민주주의 후퇴 저지, 파병반대 등 민주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적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을 견지하였지만 IMF체제와 WTO 개방 등의 세계화 문제, 공공성의 후퇴와 사유화, 노동자·민중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사실상 자유주의 개혁정권의 경제정책에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전체 시민운동을 낙선운동 같은 단기적인 정치적 운동에 총동원시키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구 대 개혁의 전선에서 상당한 정치적 파급력을 가져왔지만, 그 같은 운동이 성공하면 할수록 진보적 성향의 민중운동 또는 탈국가적인 풀뿌리 지역운동과는 사회적 거리가 생겨났으며 시민사회의 하부구조는 만성적으로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구조와 환경 그리고 대중적 기반은 취약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가치와 영향력은 과잉 대표됨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대안자치운동, 교육·보건·농업·공공성 등 민주적 사회운동은 부차화되고 참여연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이 주도한

낙선운동과 정치개혁운동만이 시민사회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그간의 시민운동에 대한 하승창 사무처장의 진단은 운동의 기반, 운동방식과 조직 내 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운동의 정체성과 가치지향의 방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 집단과 상근자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중앙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대중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정책수행에 적합한 조직활동양식보다는 낙선운동, 부패청산 등 정치적 영향력의 확산에 적합한 조직활동양식을 강화하는 형태로 활동을 전개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자유주의적 정치개혁에 치중한 참여연대의 정치적 시민운동은 결과적으로 수구보수세력을 퇴장시키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는 사회변화를 추동해 왔지만, 반면 세계화된 조건 속에서 시장과 경쟁을 앞세운 자유주의적 정권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대중적 사회운동인 기층 민중운동과의 공조와 연대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정치개혁 의제를,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넘어서지 못하는 참여연대 같은 주요 시민단체의 활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를 온몸으로 받아 안고 있는 지역과 민중운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운동과의 대중적 결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참여연대는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 치중하면서 이라크 파병과 FTA,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비정규직, 빈부격차 해소 문제 등 사회운동 진영의 핵심적인 정책 의제를 제외시켰다. 그 결과 낙선운동은 부패청산과 탄핵반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의제에 국한되고 지역과 부문의 대중적인 사회운동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적 의제에서 분리되어 시민사회 안에서 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

는 강화되고 진보주의 세력의 헤게모니는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시민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이 보다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로 인해 야기된 사회공공성의 파괴와 사유화, 전쟁과 빈곤, 민주주의의 후퇴와 생태계 파괴, 비정규직 노동자·이주 노동자·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생계 문제 등의 첨예한 이슈들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급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방식도 전문가 방식의 언론플레이를 넘어서서 지역과 부문에 걸쳐 전개되는 민중적 사회운동과의 폭넓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회운동적 연대전략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화가 야기한 사회변화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시민운동의 발전 없다

한국 사회는 IMF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불과 6년 만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공공적 해결의 축소와 시장적 해결의 증대, 환경의 무시와 이윤과 개발을 위한 시장논리의 확산 등 사회적 통합시스템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의 56%가 비정규직이 되고, 1천만 명 이상의 민중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초국적 자본의 늪음판으로 전락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우리 사회는 80대 20의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됨으로써 중산층을 기반으로 했던 90년대 시민운동의 사회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전문가 중심의 운동, 상근자 중심의 이슈 파이팅과 언론플레이로는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전문성과 정책대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민중적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혁신하고 그 속에서 대중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호 간에 그 같은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에 상호소통과 연대보다는 첨예한 긴장과 대립의 경향만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미 중산층 중심의 시민운동, 전문가 중심의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이 위와 같은 민중적·사회적 이슈와 운동을 시민사회운동의 주요한 의제와 가치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다. 발제자가 지적하듯이 90년대 방식의 정치적 시민운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일면 동의하나, 그 방향과 전략이 시민운동의 정체성과 운동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없이 단지 활동영역을 정치영역에서 사회적 공공선의 영역이나 풀뿌리 지역운동으로 전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풀뿌리 지역운동은 정치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이나 초록정치연대 같은 진보적·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과 중층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했으며 진보적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노동자·민중을 기반으로 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같은 중앙의 시민단체들이 풀뿌리 지역운동이나 민중적 사회운동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식의 자유주의 개혁의제를 넘어서서 시민운동의 프로젝트를 사회운동적으로 급진화하거나 아니면 민중적 요구에 기초해서 정부 공공정책과 기업에 대한 폭넓은 감시통제운동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제자가 주목하는 인터넷과 개인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도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무시할 수 없는 유효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같은 운동방식이 90년대식의 동원전략을 대체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은 주요 전략으로 진지전을 구사하겠지만 여전히 대중동원을 위한 기동전과의 결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지배력이 확장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운동의 전략도 또 다른 진지인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사회운동의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대중과

의 결합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 차원의 운동은 오프라인상의 운동과 결합할 때 비로소 운동의 지속성과 전략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전문가, 상근자에게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적 시민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해야 한다. 즉 노동자·시민들이 온라인 공간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구체적인 운동과정에 참여하여 상호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추구함으로써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운동형 민주주의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상의 운동도 이같은 대중의 자치와 연대에 기초한 참여민주주의와 결합될 때 보다 가치지향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발제자는 기존 시민운동을 앞서가는 정치적 시민운동으로 노사모, 국민의 힘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오른쪽에서 본 것이고, 왼쪽에서 보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교육·보건의료·문화예술·노동·농민·공무원·법조인·지식인 영역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민주노동당과 관련하여 전개한 정치적 사회운동의 흐름을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향 그리고 대중적 발전전망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정치적 수준에서 보수와 개혁, 개혁과 진보로의 분화가 불가피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도 자유주의적 정치개혁을 넘어서서 민중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는 진보적이고 생태적인 가치실현, 일국적 민족주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지구적 연대를 실현하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의제와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갇힌 시민운동을 넘어서서 민중과 함께 하는 대중적 시민 사회운동으로 나아가자

시민사회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주객관적 조건은 시민운동의 위기에도 불

구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주어지고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시스템의 붕괴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운동, 민중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향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기자본 감시운동, 공공정책 감시운동, 반전평화운동, 교육개혁, 보건의료개혁, 언론개혁, 비정규직·이주노동자·여성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를 보다 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사회운동으로, 대중적인 시민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는 새만금 갯벌살리기운동과 부안의 핵폐기장 설치반대운동, 지역공동체운동, 대안자치운동 등 지역에서 생활공동체를 방어하고 대안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셋째, 민주노동당이 총선 후 원내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집권여당 역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시민사회수석실과 사회정책수석실을 두는 등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대한 이같은 정치권의 관심이 지역과 부문에 뿌리내리는 대중적 시민사회운동을 촉진하기보다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과잉동원하는 경향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승창 사무처장이 문제 삼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중성 확보는 단순히 생활정치나 지역자치로의 회귀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는 시민사회운동이 실질적으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지점에서 시민운동이 선거 시기에 진보적 정치세력(민주노동당), 진보적 가치를 공유한 생태적 정치세력(초록정치연대) 또는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열린우리당)과 관련하여 정치적 태도를 밝히고 포지티브 방식의 지지운동을 전개한 것이 시민사회운동의 상대적 독립성과 사회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친화력을 강하게 내포하는 준정당적인 참여연대 중심의 선거전술이 문제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시민사회운동의 진보화, 급진화는 물론 대중화 전략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단체가 대중적 시민운동의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정책집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아래로부터 성장하는 대중적 사회운동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는 정치적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동안의 연대방향은 민중운동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했다는 발제자의 평가는 다분히 민중운동에 대한 피해의식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프로그램에는 권력에 대한 정치적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도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노동운동이 자신의 조합주의적 한계로 인하여 시민사회 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할 때, 시민운동이 앞장서서 자신의 자유주의적·보수주의적 시민운동의 한계를 넘어 민중적 의제, 진보적 의제를 중요한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 왔다면 그 같은 방어적 사고에 갇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런 면에서 시민운동 진영이 정치적 연대와 관련해서도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넘어서는 진전된 프로그램을 추구했으면 한다. 그래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오는 2006년 지자체,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등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과 추구해야 할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기존의 민주노동당과 공존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공동의 정치적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간의 사회적 연대도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사회적 프로그램도 지금과 같이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적 의제가 아닌 진보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포괄하는 발전적 의제로 재구성되고 혁신될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의 대중운동화를 위해서는 지역운동과 기층대중조직과의 연대를 넘어서서 상호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 역시 90년대 패러다임인 전투적 조합주의와 실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서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한 생태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교육과 의료, 사회공공성의 문제, 자본에 대한 감시와 통제, 전쟁저지와 평화군축의 문제를 노동운동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노동운동의 이같은 고민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계기로 지역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중요하게는 노동운동의 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민중운동과의 연대는 단순히 시민적 의제를 지역과 기층대중조직으로 확산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성찰적인 방향에서 시민사회의 과제를 민중지향적인, 진보적인 가치와 의제로 전환시켜 내는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결합은 단순히 악어와 악어새 이상의 공생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운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이희수 hslee0628@naver.com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문화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민주노동대의협력실장 및 전국민중연대 운영위원 역임.